

대학생의 정치의식과 바람직한 참여 방향

이종렬 | 강원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1. 머리말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맞은 1989년을 전후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변모하고 소련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를 “이데올로기적 진화의 종점에 이르렀으며, 최종적인 정치 형태로서의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보편화되었다”고 보는 견해까지 나타났다.¹⁾

과거 권위주의 독재 체제하에 있던 많은 비서구사회가 민주주의의 ‘이행’ 단계를 넘어서 ‘공고화’의 단계로 들어섰다.²⁾ 이러한 역사적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한국 정치도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로의 복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전망은 한국 시민사회의 급속한 성장으로 현실이 되어 왔

다. 요즈음 시민단체들이 낙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하며 시민불복종 운동으로까지도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마도 새 천년이 시작된 시점에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바마스 는 한국사회가 한세대 내에 전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놀라워하고 있지만,³⁾ 우리는 이제 기적적인 경제성장에 이어 정치영역에서 시민혁명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정치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선거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란 주로 투표에 국한되어 있었다. 인물 위주의 정당, 정당 내 의사결정의 비민주성 등과 같은 한계를 지닌 한국 정당들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 후보자는 각 정당의 보스가 결정하였고,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정당원조차도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다면 낙천, 낙선, 시민불복종 운동 선언은 정

1) Francis Fukuyama(1989),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No.16, 3~18.

2) Juan J. Linz & Alfred Stepan(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3) Jurgen Habermas(1998), “Learning by Disaster? A Diagnostic Look Back on the Short 20th Century”, *Constellations*, Vol. 5, No.3, pp.307~320, p.308.

차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시민운동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낙천·낙선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제·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은 낙천·낙선운동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하고 있다.

시민불복종 운동은 법치주의 원칙과 충돌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단체들의 급진적인 움직임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입장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 사이에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1987년 이후의 선거에서 날이 갈수록 뚜렷해진 한국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지역주의의 병폐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이 현실화되고 노조와 경제단체들 또한 선거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과거보다 훨씬 많은 집단들이 선거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소용돌이의 폭과 깊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단이 3월 초부터 구체적인 활동을 보일 것이며, 이들은 바로 대학생 집단이다. 대학생은 시민단체들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가능케 한 주요한 참여자였다. 이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없었다면 시민단체들의 위상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그들의 동질성에 바탕을 둔 강한 응집력을 표출하게 될 3월 이후부터 어떠한 집단 행동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 4·13 선거정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변수가 될 것이다. 이는 이들의 정치의식이 어떤 구체적인 정치 쟁점과 연결될 때 쉽고 급속하게 동원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 대학생의 정치의식과 참여 행동

일반 국민들은 대학생이 지금까지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공헌한 집단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대학생들 스스로도 학생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⁴⁾ 이에 강한 긍지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헌신적으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강한 자의식을 지니고 있다.⁵⁾ 그리고 대학생의 정치참여는 다른 하위집단의 그것에 비해 보다 진보적이며 급진적인 성향을 보인다. 나아가 이들은 의식과 행동의 괴리가 가장 적은 집단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점에서 우리는 대학생 집단의 정치가 다가오는 총선에 끼칠 영향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참여가 끼칠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의 정치문화가 지니는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정치세계가 한국 정치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1) 한국의 정치문화와 한국인의 정치의식

한국 정치문화의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가장 주요한 요인은 '권위주의'와 '시민성'이라 할 수 있다. 권위주의란 "강력한 지도자를 바라고 권위에 복종하고 국가에 추종하는 경향"⁶⁾을 말한다. 권위에는 복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정치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 없이 묵종한다면 권위주의 정권을 민주주의의 형식적 절차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주의 가치관을 전제로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정치공동체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특정 정권과 국가를 동일시하고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은 이 가치관과 갈등할 수밖에 없

4) 이정복, 김호섭(1989), "우리 나라 국민의 정치의식조사", 한국정치학회편, 『한국정치의 민주화』, 서울: 법문사, pp.387~653, p.411, 432, 616~617.

5) 한충효, 최현섭, 이종렬(1990), "한국 대학생의 정치사회의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 30집, pp.177~208, p.200~201.

6) 윤천주(1979), 『한국정치체계 정치상황과 정치참여』, 서울대학교 출판부, p.265.

다. '권위주의' 요인이 과거 권위주의 체제를 지탱시켜온 정치문화의 기반이었으며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시민성'은 국가가 사회영역을 전반적이고도 포괄적으로 통제하던 권위주의 정치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왔고, 특히 1980년대 후반이후의 민주화 운동과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요인이다. '시민성'의 정치문화가 성장하였다는 것은 곧 권위주의적 지배 세력인 보수적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시민층의 저항과 비판이 증대하였음을 의미한다. 최근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은 그 정점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치문화의 갈등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조정하여 민주화를 완성하는 단계로 나아가느냐, 그리고 선거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실현하느냐는 점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단순히 정당들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권위주의'와 '시민성', '보수'와 '진보', 그리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 특히 '지역주의'로 나타나는 지역간의 긴장과 갈등 등을 민주주의 원리와 절차에 따라 조정, 완화, 해결하는 선거로 민주화를 한단계 높여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완성하는 '축제'로 치러야만 한다. 선거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정치문화에 내재한 권위주의 요인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인은 집단체제의식(group identity)과 계층적 인간관계(hierarchical relationship)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⁷⁾ 전통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를 매우 중시해 왔다. 이러한 태도는 일차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소중한 전통이지만, 정치참여 여부와 정치적 선택이 개인의 자율성이 아닌

개인이 속한 집단 내 우두머리(長)의 권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태도에 따른 투표는 준봉투표, 동원투표로 나타난다. 단순히 투표율이 높다고 시민으로서의 참여의식이 높은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민주 시민성의 정치의식 수준은 낮으면서 오히려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 동원되는 투표 행태, 또는 자신의 확신과 관심에 따른 자기 결정의 관심투표(interest voting)가 아니라 집단적인 압력, 인간적인 유대, 돈과 권력의 영향에 따라 하는 준봉투표(conformity voting)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 행동이라 할 수 없다.

연고의 중시가 연공동체의식의 표현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합리성과 도덕성을 가리고 이기적 욕망을 향해 움직이는 연집단 이기주의이고 이것은 극복되어야만 한다. 배타적인 자기집단 중심의 논리와 정서에 따라 공사의 조직체를 불문하고 그 조직체의 충원이나 조직체 내의 주요 의사 결정, 그리고 가치 배분에 공식·비공식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다른 연고집단의 집단 이기주의와 충돌하는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정치과정을 왜곡시켜 공정한 가치 배분의 정책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각 집단의 이익 입장들을 국가가 전반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조정·통제하던 과거 권위주의 체제와는 달리 이제는 각 집단의 이익이 매우 다양하게 조직화되어 정치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영역의 급속한 정치화는 민주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연집단 이기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서는 비민주적인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비민주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혁과 함께 '권위주의' 요인

7) '지역주의'의 문제는 지역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주의 양상은 선거가 민주화'를 표방한 정치세력과 '안정과 발전'을 내세운 세력간에 치러진 그 이전과는 달리 1987년 이후에는 '민주 대 반민주'라는 구분이 선거 쟁점이 될 수 없게 되자 각 정당이 그 지지기반을 지역 연고에서 찾고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서 심화된 병폐이다. 따라서 문제가 마치 지역 주민들간의 지역 감정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각 개인이 '지역주의'에 따라 동원투표하거나 준봉투표하는 행태를 벗어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요한 책임이다.

8) Yoon Dae-sub(1977), "A Study of Korean Political Culture", in *Proceedings of the Second Joint Conference*, Seoul: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p.47~63.

의 영향을 불식하고 '시민성' 요인을 확산하는 정치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문화의 개혁은 자유 민주주의를 전제하는 시민운동의 전략을 따라야 한다. 이는 정치문화가 우리 사회의 다원적인 하위 집단들이 지닌 하위 정치문화들로 구성되지만 이들 하위 정치문화들의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하위 정치문화간의 균열상을 극복한 통합된 정치문화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문화 개혁에는 우리 사회 내의 지역, 계층, 세대, 정치 엘리트, 시민단체, 사회집단, 정당 등의 모든 하위 집단들이 자율성을 지니고 책임 있게 참여하여야 한다.

2) 대학생의 정치의식과 참여 행동

한 하위 정치문화로서 대학생 집단의 정치문화도 권위주의와 시민성 요인을 모두 지니고 있지만 타 집단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특징들을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학생은 한국의 민주화에 가장 공헌한 집단으로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매우 선구적이고 희생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행동하는 성향이 강하고, 특히 이들은 다른 어떤 집단이나 세대에 비해 정치의식과 정치행동의 괴리가 가장 적은 집단이다. 이들은 연령, 사회·경제적 배경, 일상적 경험세계 등에 있어 매우 동질적인 집단으로서 의식의 감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은

비인습적 정치참여의 시간적 여유를 가장 많이 지닌 집단이기도 하다.

대학생들의 정치의식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들이 낮은 정치신뢰감(강한 정치적 냉소주의)과 높은 정치효능감으로 결합된 이의의 정치정향⁹⁾을 보인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대학생은 1987년과 1989년의 조사에서 2, 3, 4학년이, 그리고 1990년의 조사에서는 전체의 78.1%가 이의의 정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현재 대학생이 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994년과 1995년의 조사 연구에서도 이들 대부분이 이의의 정치정향을 보이고 있다.¹⁰⁾ 이러한 이의 정치정향의 비율은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서,¹¹⁾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 내에서 급진적인 정치행동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임을 보여 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이의의 정치정향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적 동원과 최적의 결합관계를 이룬다는 점 때문이다.¹²⁾ 이의의 정치정향을 지닌 이들에게 구체적인 정치쟁점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곧바로 적극적인 참여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대학이 개강하는 3월은 앞으로 시민운동과 국회의원 선거정국의 향방을 가름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 서 있다. 이미 많은 대학의 학생회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지난 1월 20일 한국총학생회연합은

9) J.M.Paige(1971)가 제시한 모형에 따른 것으로, 그는 정치체계의 투입국면에 대한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과 산출국면에 대한 정치신뢰감(political trust)의 결합에 따라 정치정향을 충성(allegiant), 복종(subordinate), 이의(dissident), 소외(alienated)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J.M.Paige(1971),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6, pp.810~820.

10) 이종렬(1987), "한국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의 불연속성에 관한 연구", 198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한충효, 최현섭, 이종렬(1990), "한국 대학생의 정치사회 의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 30집, pp.177~208; 이종렬, 안범희, 김선중(1992), "한국 대학생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연구』, 제 2집, pp.117~143; 이종렬(1995), "한국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의 문제점과 정치교육의 과제", 『사회와 교육』, 제 21집, 한국사회과학교육학회, pp.9~41; 이종렬, 김해성(1996), "한국 중고등학생의 정치의식 성장과정의 문제점과 시민성 훈련의 교수전략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연구보고서.

11) 1995년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30.7% 정도가 이의의 정향을 보이고 있고,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1992년 12월의 조사에서는 이의의 정향을 보인 비율이 43.5%로 나타났다.

안병만, 김인철(1993), "유권자의 정치정향과 투표행태-14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7집 2호(上), pp.99~120; 안병만, 김인철, 서진원(1995), "6·27 지방선거에 나타난 유권자의 정치정향과 투표 행태", 『한국정치학회보』, 29집 4호, pp.373~392.

12) W.A.Gamson(1968), "Power and Discontent", *Homewood, Ill: The Dorsey Press*, p.48.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한다”고 하였으며, 40여 개 주요 대학이 참여한 ‘전국학생회협의회’는 1월 29일 모임을 갖고 ‘대학생총선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세부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보아 3월부터는 대학생의 정치참여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날 대학생 집단의 정치참여가 엘리트 의식을 지니고 대학 사회 내에서 여론지도자의 역할을 해온 이른바 ‘운동권’의 주도하에 주로 비인습적인 참여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보면, 이미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대학의 ‘운동권’이 변모한 상황에서도 과거와 같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선거정국에 대학생 집단이 끼칠 영향이 매우 클 것임은 분명하다.

대학생의 정치의식은 이처럼 강한 정치적 동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서 정치적 쟁점과 연결될 때 급진적이고 과격한 비인습적 참여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것이 지난날의 학생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들의 인습적 정치참여 행동, 특히 투표 참여행동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학생을 포함한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이 전체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60%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짐작하는 것보다도 높다. 20~30대는 1995년의 6·27 지방선거 때 전체의 57.4%(전체 유권자 3,068만 9천명, 20대: 29.6%, 30대: 27.8%)를 차지하였고, 1996년 4·11 총선에서는 55.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기권율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 높다. 20대와 30대의 기권율이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각각 39.5%와 22.9%로서 40대의 9.5%, 50대의 7.6%, 60대 이상의 20.5%에 비

해 매우 높았으며,¹³⁾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5.6%와 17.2%로서 40대의 7.3%, 50대의 9.1%, 그리고 60대 이상의 9.9%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⁴⁾ 또 다른 조사 연구에 의하면¹⁵⁾ 14대 총선에서 1962년 이후 출생한 20~30대의 ‘신세대’는 1950년 이전 출생의 ‘전전 세대’보다 4배, 그리고 1950년에서 1962년 사이에 출생한 ‘민주세대’보다 2배 이상의 기권율을 보였다. 그리고 1991년의 광역의회 선거에서의 대학생의 투표 참여율은 39.5%로서 전체 투표율 58.9%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¹⁶⁾ 이와 같이 20~30대의 젊은 세대가 40대 이후의 세대보다 강한 시민의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투표참여율은 낮고, 준봉이나 동원 참여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50대 이후 세대들의 투표참여율이 보다 높은 것은 선거참여 문화에 세대간 균열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젊은 세대인 20~30대의 투표참여율은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미 각 대학 학생회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그 자체는 대학생들의 참여라는 지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투표참여 없이 낙선대상자들의 당선 저지라는 낙선운동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대학생의 투표참여는 낙선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낙선운동의 지지 여부는 엄밀하게는 유권자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이다. 투표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원칙이다. 어떤 면에서든 대학생의 투표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대학생들의 자원봉사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큰 데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들의 참여

13) 김광수(1986), “투표기권자의 사회인구론적 특성과 그 불참 사유에 대한 연구: 누가? 왜? 투표를 안하는가”, 의정연구, 제 24집, pp.12~13.

14) 이남영(1992), “투표참여와 기권: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 선거와 정치참여, p.145.

15) 정진민(1994), “정치세대와 국회의원 선거”, 한국정치학회보, 28집 1호, pp.257~274.

16) 현대사회연구소(1991), “대학생의 의식조사연구”, 서울:현대사회연구소, p.61.

양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들의 4·13 총선 투표 참여율은 과거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맺는 말

우리가 기대하는 선거혁명은 시민단체들의 참여만으로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학생 집단의 참여로 충분한 것도 아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모든 참여 주체들이 민주주의의 절차 원리에 충실함으로서 공명선거가 실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관용'을 실천하여야 한다. 특히 관용을 강조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할 것이고, 이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모든 참여 주체들이 과거와 같은 선거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혼탁하게 치러질 것이다. 관용은 '반대의 관용'을 의미한다. 경쟁상대자, 이해관계 또는 가치 입장을 달리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자신의 그것과 대등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려에 필요한 대화, 타협, 조정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시민단체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옳고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것으로 고집한다면 시민단체 독재로 갈 수 있다. 이는 정당을 비롯한 다른 선거 참여 주체들의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이다.

대학생들과 나아가 20~30대의 신세대들이 전체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따라 비판적이고 책임 있게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허물고, 준보·동원투표의 양상을 극복하기를 기대해본다. 이들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전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의식을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의 정치의식과 참여행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민주적 태도와 권위주의 성향을 동시에 지니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으나 정치참여에서는 폐쇄적이고 비타협적이며 철차적인 비민주성을 띠는 과격한 행동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¹⁷⁾ 어쩌면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시민단체들의 시민불복종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정치상황이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의 그것과는 크게 변화하였다. 독재·권위주의정권 하에서 학생운동이 비인습적인 참여영역에서 급진적이고 과격한 양상을 띤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공고화 단계로 들어선 지금은 정치참여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절차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참여가 그들 세대의 특성에 맞게 자발성, 합리성, 도덕성을 준거로 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대를 넘어서 한국정치의 미래 주역으로서 마땅한 민주시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이들이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봉사하는 참여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참여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하고 특히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의 자질인 시민성의 본질은 자발성과 합리성에 있다. **■**

이종렬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사회교육학회 부회장, 미국 인디애나 대학 방문교수로 활동하였고, 현재 강원대 사회교육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사회교육연구(공저)』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정치문화 개혁과 시민교육 방안", "한국 중·고등학생의 정치의식의 성장과 변화" 기타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와 시민교육 분야의 논문이 다수가 있다.

17) 한충효, 최현섭, 이종렬(1990), 삼계서, p.206.